전국에 구제역이 급속 확산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비상이 걸렸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주말과 휴일 각각 방역초소를 방문, 근무자를 위로하고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9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6개 반 39명 규모의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백신 접종도 무위…구제역 속수무책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살처분 100만마리 넘어서

"정부 초동방역 실패가 재앙 불렀다" 농민들 절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자식처럼 키워온, 1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 닭, 오리를 하루 아침에 땅속에 파묻은 축산·양계농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 확산…100만 마리 매몰=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9일 현재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 51개 시·군, 109곳에서 발생했다. 소에서 시작한 구제역은 감염속도가 3000배나 빠른 돼지로 번지면서 전국을 휩쓸었다.

천안과 익산의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끝내 천안·전북·전남 영암의 양계농가로 번졌고 경남 사천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확산 조짐이다.

매몰 대상 가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매몰 대상 가축은 전국 3305개 농장에서 128만2345마리에 이르고 이 중 105만7939두(82.5%)가 살처분돼 묻혔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구제역 대책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하고 발생 시·군을 중심으로 예방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구제역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후의 수단'인 백신 접종, 효과는 의문?=정부는 9일 현재 백신 접종 대상 가축이 5만6335개 농장의 132만1953마리에 이르고 이 중 91만6346두(69.3%)가 주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기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 6개 시·군과 경북 경산·청도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에도 불구, 전국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접종 이후에도 살처분 농가 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파주·연천·고양은 지난해 12월25일 경북 안동, 예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접종이 이뤄진 지역이다.

파주의 경우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해 12월15일 살처분 대상은 2380마리였다. 열흘이 지난 12월26일 파주 지역 살처분 대상은 3만1805마리(누계)였지만 6일 현재 4배 가까운 12만464마리까지 치솟았다.

축산농민들이 "정부는 백신이 구제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살처분 양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고 반문하며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 지역에도 구제역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97년 3월 돼지 구제역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백신 3천만개를 접종했으나 한 달 뒤인 4월 오히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백신을 사용해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 형태가 7가지나 되지만 혈청 형태가 같더라도 변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한 족집게 처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발생 지역에 대한 백신 접종은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북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이 실시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백신접종 후 죽거나 유·사산한 소 마릿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우왕좌왕, 농민들 "누굴 믿나"=농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한 초동방역 실패가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동의 돼지 농가에서 작년 11월 23일 최초로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으나 이를 엿새 뒤에 확진 판정을 내렸고 11월 23~28일 안동 지역의 한우 15마리가 경기와 경남, 충북 등지로 빠져나가는 등 차단 망에 허점도 드러났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뒤 역학 관계에 있는 농장이나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 충분한 사전 차단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백신 접종의 시기도 논란이다. 백신 접종이 살(殺)처분을 통한 차단 방역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선택하는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좀 더 일찍 백신접종이라는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신 접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의 시기가 늦어져 접종 효과가 미약함을 반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희락 前경찰청장 오늘 소환

'함바집 비리' 수사…국토위 의원 2~3명 연루 포착

'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아울러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번 주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하고, 이미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 조율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은 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모(65)씨가 국토위 소속 의원 2~3명에게 건설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이들 외에도 민주당 조영택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합법적 후원금'이라 주장하고, 이 의원은 금품수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가 2008년 현직 차관급 기관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넸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에게 금품을 주고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유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가 검거될 경우 자신의 연루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유씨와 관계를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전 청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자신이 출국금지 당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난 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됐다. /연합뉴스

■ 브로커 유상봉은 누구

완도 출신…마당발 '전국 함바 대부'

휴대전화만 13대…'카멜레온 로비'

이른바 '함바 게이트'로 불리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의 중심 유상봉(65)씨는 완도 출신으로 초창기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사업 붐을 타고 전국으로 무대를 넓히며 '함바 대부'로 통했다.

목포고(14회)를 다니다 1학년을 마치고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목포고 총동창회는 유상봉이란 인물을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60㎝ 가량의 키에 50㎏의 왜소한 체구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높은 분'들과의 줄을 강조하며 잘나가는 노신사로 행세했다. 회사 5~6곳의 대표 직함과 '유상준·유상균' 등 서로 다른 이름이 박힌 명함을 번갈아 돌리며 함바업자들에게 접근했다.

휴대폰은 항상 3개 이상씩 들고 다니며 무려 13개나 번갈아 사용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번호를 남겼다. 자신이 사기 대상으로 점찍은 상대에게는 하루 30번이 넘는 전화를 해 감언이설로 꼬드겼다.

유씨는 2008년 통영의 지역 문화단체 2곳에 1억여원을 기부하는 등 부산·경남권 일대에서 큰손 노릇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따낸 뒤 자신이 거느린 2차 브로커들에게 이를 팔고, 이들 2차 브로커는 실제 함바집 업자들에게 운영권을 다시 파는 식으로 목돈을 챙겼다.

그러나 투자자 일부는 약속대로 운영권을 넘겨받았지만 대다수는 억대의 알선료를 내고도 운영권은 커녕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함바를 운영하며 3년 전 유씨에게 현금 8억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박모(여·60·광주시·가명)씨는 "한마디로 '사기 100단'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며 "같은 지역 고향 사람임을 강조해 거짓말을 할거라 생각지도 못했지만 반대로 그 점을 이용, 호남권 피해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유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해 지난달 24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임동률기자 exian@